

제2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2. 2. 1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2월 11일(금) 13:23~16:49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의결안건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은 계속하여 심의할 예정이므로 관련 회의록은 최종 의결 후 일괄 보고하기로 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3호 『(주)셀트리온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4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5호 『(주)셀트리온제약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일괄 재상정함.

▷ 진술인(제14호 관련)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당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재무제표상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 받았으며 송구스럽게 생각함. 다만, 지적사항 중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회계기준해석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 핵심사항 위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함. 먼저, 상장 관련 사항임. 금감원은 본사가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를 위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맞지 않은 사항임. 첫째,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대형법인에 대한 특례적용 법인에 해당하여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당기순이익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둘째, 재무적 투자자는 상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풋옵션 행사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풋옵션 행사 가능성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재무적 투자자와 협의하면서 상장절차를 진행하였음. 셋째, 재무적 투자자는 공모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고 재무적 투자자와의 계약에서도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도 않았음. 따라서 상장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감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고자산평가손실 관련임. 금감원은 유효기간 경과로 판매가 불가능한 허쥬마 의약품에 대해 당사가 재고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맞지 않음. 2016년말 당시 회사는 허쥬마의 재고자산의 유효기간 이슈(issue)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었음. 첫 번째 옵션은 원료의약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료의약품을 완제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임. 2016년말에 회사는 당시 (주)셀트리온이 보유하고 있었던 과학적 자료와 허가규정에 근거하

여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만약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완제의약품으로 전환하였을 것이며 이 경우 유효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재고평가손실을 반영할 이유가 없었음. 다음으로 사후정산부채 인식 관련 사항임. 당사는 원칙중심의 IFRS 회계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일관된 회계처리를 수행하였음. 또한, 지금은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만 당사가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판매를 시작할 당시에는 가격추세를 예측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가격추세에 근거하여 사후정산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해당 시점에서의 이용가능한 정보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감사방해 관련임. 당사는 고의로 지적된 재고자산평가손실 관련 자료나 (주)셀트리온과의 재고자산교환 사실, 사후정산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회계감사과정에서 감사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거짓진술을 하거나 자료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공하여 최선을 다해 회계감사에 대응해 왔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심의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의 지적사항 대부분이 기간귀속과 관련된 문제로서 누적적으로는 재무제표에 모두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됨. 또한, 상장요건 충족과 무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사기상장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부디, 이번 회계감리를 통해 셀

트리온그룹이 회계적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어 당사의 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관리전반에 걸친 재정비를 통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 (진술인)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더 보충하면서 간략히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금감원은 상장요건과 관련해서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 가능성 그리고 상장요건 충족 여부, 공모가격 산정을 근거로 당사의 위반동기를 고의로 지적하고 있음. 먼저,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상장절차를 완료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6년말 이미 회사의 가치는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가치의 한도를 초과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재무적 투자자는 상장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포기하고 풋옵션을 행사할 요인이 전혀 없었음. 참고로 상장을 앞둔 당시 당사의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은 49,000원이었고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가치 한도는 27,672원이었음. 또한, 사후적으로 확인된 공문을 통해서도 상장기한 경과나 목표영업이익 배분 비율 미달성을 근거로 풋옵션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상장의 경우에는 2017년에 완료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018년까지 상장기한을 연장했을 것이며 목표영업이익의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것도 매입단가결정의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무적 투자자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음. 두 번째는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고의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는 세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대형법인 특례요건의 적용으로 상장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예비심사청구서에서도 대형법인요건으로 제출이 되었음. 또한, 당사가 제출한 예비심사청구서에는 허위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한국거래소 요청에 따라 추가로 제출된 자료 중 오류가 존재하지만 이는 어떠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님. 마지막으로 공모가격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단지 주관사가 작성한 시뮬레이션 자료만을 근거로 ○○○가 6조 원 이상의 공모가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의 공문에서도 그러한 요구를 한 적도 없고 계약상 그러한 요구를 할 권리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음. 또한, 자발적 보호예수를 통해서 2018년부터 주식을 매각한 ○○○ 입장에서는 공모시점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음. 다음은 재고자산평가손실 미계상 지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금감원은 유효기간 연장가능성이 없으며 허쥬마 100A의 판매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허쥬마 재고자산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유럽 등에서의 판매허가 이후에 유효기간 연장절차를 통해서 해당 재고의 출하시점에는 유효기간에 문제없이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었음. 또한, 당시에 60개월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3배치의 안정성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었고 85개월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1배치의 안정성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 비록 1배치의 안정성자료로는

규제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없지만 후행적으로 수행되는 84개월 안정성시험이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음. 그리고 2016년말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유효기간 연장에 실패한 사례가 없었고 동일한 환경에서 보관되는 원료의약품이 85개월 안정성시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 가능했음. 이처럼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향후의 판매허가 가능성과 유효기간의 연장가능성을 통해서 자산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산업의 관행(practice)임. 또한, 2016년말 원료의약품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거나 외부감사인이 이에 대해서 이슈(issue)를 제기했다면 당사는 해당 원료의약품을 완제의약품으로 전환하면 쉽게 유효기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음. 실제로도 2014년과 2016년에는 원료의약품의 유효기간 관리목적으로 원료의약품을 완제의약품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음. 다만, 허쥬마에 대해서는 판매허가가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추가적으로 완제의약품으로 생산하기 보다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완제의약품 전환이 아닌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임. 설사 유효기간 연장 가능성이 낮고 완제의약품 전환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6년말부터 (주)셀트리온과 논의되었던 운송밸리데이션을 위한 재고자산 교환이 발생하면 당사 입장에서는 유효기간 이슈(issue)가 모두 해소되기 때문에 더욱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할 이유가 없었음. 만약 2016년말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했다면 재고자산 교환이 결정된 시점인 2017년 3월에는 평가손실

을 다시 환입하는 회계처리가 발생하여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었을 것임. 또한, 금감원은 원료의약품뿐만 아니라 확보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완제의약품에 대해서도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판매허가 이후에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한 재고임. 두 번째로 허쥬마 100A의 판매 가능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음. 유럽에서 허쥬마 200A 판매 허가 이후에 100A로의 변경 허가가 가능한 상황이었음. 그러나 금감원의 주장과 같이 유럽에서 허쥬마 100A의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허쥬마 100A는 자체적으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외의 기타 국가(ROW)들에서 판매허가를 받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판매허가 이후에는 ROW국가에서의 판매만으로 얼마든지 유효기간 이내에 재고를 소진할 수 있었음. 실제로 당사는 허쥬마 100A나 200A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동등한 제품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 왔고 재고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해외유통사들 또한 100A와 200A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받은 허쥬마라는 제품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만약 100A와 200A를 동시에 허가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구분 없이 허쥬마라는 제품으로 주문이 이루어지고 판매도 이루어지게 됨. 또한, 금감원은 실제 100A로 판매허가를 받은 국가가 없기 때문에 판매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6년말 현재 시점에 브라질과 터키에서는 이미 허쥬마 100A로 판매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2016년에 작성

된 사업계획에서도 해당 국가에 대해 허쥬마 판매계획이 반영되어 있었음. 또한, 금감원은 당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ROW국가의 시장규모가 작아서 유효기간 내에 재고자산을 소진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후적으로 ROW국가에서 판매된 허쥬마의 수량만 감안하더라도 2016년말 보유 중이던 재고수량은 모두 판매 가능한 수준이었음. 3,000억 원의 재고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판매허가를 통해 판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판매할 의도도 없었고 판매할 시장도 크지 않았다는 금감원의 주장은 회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임. 다음은 재고자산 교환·반품과 관련한 주식 공시 사항임. 허쥬마의 재고자산 교환이나 트룩시마의 반품·교환거래는 당사 입장에서는 미래 현금흐름에 변동이 없는 사건으로 회계처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당사 재무제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항이었음. 이처럼 회계처리 자체도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주식으로 공시하는 것은 질적으로도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음.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교환거래의 결과로 미래 현금흐름이 얼마나 변동될지에 따라서 상업적 실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한다면 당사의 이러한 재고자산 교환 거래 또한 상업적 실질이 없는 거래로 판단할 수 있음. 또한, 동 거래의 주식 기재 여부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고 설사 이러한 교환거래가 주식 기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판단한 부분은 지나친 지적이라고 생각됨. 다음은 사후정산

부채에 대한 지적사항임. 금감원은 해외유통사와의 사후정산에 대해서 수익인식기준서가 아닌 충당부채기준서를 통해 (-)정산은 충당부채, (+)정산은 우발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주장하고 있지만 사후정산은 최초 수익금액의 합의 일부로서 수익인식기준서를 적용하여 (+), (-)정산을 통합하여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서 당사는 2015년 IFRS를 최초 도입하는 시점에 사후정산과 관련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수립하였음. 해당 시점에서는 가격에 대한 추세를 예상하기 어려웠지만 서유럽 등으로 매출이 확대되면서 ○○○社の 판매 가격 또한 상승하던 추세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유통사가 제공하는 정산목적 순매출보고서에 대해서 검토 이후에 신뢰성을 확보한 시점에 정산예상금액을 매출액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수립한 바 있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일관된 회계처리를 수행해 왔음. 특히, 분기별로 정산을 수행하는 해외유통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순매출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이후에 분기별로 회계처리를 반영해 왔음. 다만, ○○○社와 같은 경우에는 연간단위로 정산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순매출보고서의 수령 이후에 검토 절차를 수행하였음. 다만, ○○○社の 경우에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신뢰성 확보가 늦어지게 되었음. 이러한 회계정책에 따라서 수행된 회계처리는 상장 과정에서 진행된 한공회 감리과정에서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는 지속적으로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해 왔음. 더욱이 사후정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제공하는 新수익기

준서 제1115호를 회사는 2017년에 조기도입하여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재작성한 바 있으므로 동 지적사항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금감원은 ○○○社の 분기평균가격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부분과 함께 2016년 10월에 개정된 계약서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동 개정사항은 2016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감사인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고 이후 동 개정계약서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2017년에는 감사인에게 제공되었음. 마지막으로 사후정산부채를 당사의 회계정책과 같이 신뢰성을 확보한 시점, 확정시점이 아닌 결산시점마다 추정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회계처리라고 하더라도 금감원이 지적하는 추정방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함. 금감원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수령한 순매출보고서만을 이용하여 아무런 검증절차나 다른 정보에 대한 고려 없이 (-)정산금액만을 충당부채로 반영하여 지적금액을 산정하고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감사보고서일까지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 (-)정산액을 통합하여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다음은 헝가리법인에 대한 매출 인식 건임. 헝가리법인과 당사 간의 동 거래는 해외유통사와 헝가리법인과 체결된 계약을 준수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의 거래임. 금감원은 헝가리법인에 판매한 원료의약품이 아닌 이미 당사가 보유 중인 완제의약품을 인도한 것을 근거로 재화의 식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두 개의 거래를 혼재하여 판단한 것임. 최초 당사는 헝가리법인에 원료의약품을

판매하였고 유럽에서의 특허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헝가리법인으로부터 인도 연기 요청을 받은 상태로 매출을 인식하였음. 이후에 원료의약품을 완제의약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러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셀트리온 공장 내에서의 GMP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헝가리법인 소유의 원료의약품을 투입하여 완제의약품으로 전환하지 않고 이미 당사가 보유 중이던 완제의약품을 인도하였음. 이는 2013년 원료의약품의 매출 인식 시점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후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별개의 거래이므로 최초의 매출인식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함. 다음은 해외유통사에 대한 매출인식의 건임. 동 사항도 조금 전 설명 드린 헝가리법인 매출 인식과 동일하게 매출 인식 시점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후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대금회수가 지연되고 계약이 해지되었던 것일뿐 매출 인식 시점에는 수익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음. 사후적으로 발생된 대금 회수의 지연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반영하는 등의 적절한 사후적 회계처리를 수행하였고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최초 계약 체결 후 약 7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계약을 해지하였음.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거래상대방이 위치한 베네수엘라의 경제환경 악화로 인한 것으로 매출 인식 시점에는 예상할 수 없던 부분이었음. 마지막으로 당사는 판매권의 매각활동을 판매권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업활동의 일부로서 주된 영업활동으로 판단하였음. 이를 근거로 동 거래를 매출로 인식한 것이며, 이는 ○○○○

○○○社를 비롯한 국·내외 타사의 무형자산 매각을 매
출로 인식한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한 사항이었음. 동
거래는 2017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오던 사항으로 판
권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시점에 실행한 것일뿐 다른
목적을 위해 수행한 거래가 아님. 동 거래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원 질의를 통해서도 판매권 매각이 주된 영업
활동인지 여부에 대한 실질판단을 하라는 회신이 있었
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 (위원) 일단,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음. 오늘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풋옵
션 행사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 회사의 주장임. 그래서 재
무적 투자자들이 사후에 풋옵션 행사 의사가 없었다, IPO
1년 연기해도 상관없다는 내용의 서류를 증빙하셨음. 이는
사후적으로 최근에 이것이 이슈(issue)가 되어서 보낸 것인
데, 사후적으로 보낸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 가능성
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금감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자) 재무적 투자자들의 사후적인 근거는 그 당시 상
황에 맞게 얘기했다고 저희가 인정할 수 없음. 그 당시의
상황은 저희가 주장하는 바로는 2016년말에 만약 재고자
산평가손실을 3,000억 원 인식하고 사후정산부채도 추가적
으로 1,000억 원 이상을 인식했을 때 당기순손실이 2,500
억 원 이상이 되었던 상황에서도 과연 이것이 상장이 가
능했고 그 당시에 그런 이슈(issue)가 만약에 평가손실이
된다면 특관자 부당지원행위도 이슈(issue)가 될 텐데 그렇
게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상장을 통해서 자기

들이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을 물어 봤어야 했고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진술인) 주주간 계약에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들은 풋옵션 행사 가치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었음. 그리고 2016년에 비상장회사로서도 그 한도를 이미 현저히 초과하고 있었고 2016년까지 상장이 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본질가치에서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음. 특히, 재고자산평가손실과 같이 기간귀속의 이슈(issue)로 인한 것들은 회사의 본질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장을 하면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그리고 2016년말에 있었던 이사회에서도 상장을 2017년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재무적 투자자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승인한 바도 있음. 그리고 풋옵션 행사하지 않겠다는 Waiver Letter를 재무적 투자자와 작성 중에 있었음.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경우 재무적 투자자가 그 당시에 풋옵션을 행사할 요인이 특별히 없었고, 상장 업무 자체가 재무적 투자자들과 언제가 적절한 시점인지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장기간이 지연된다고 해서 풋옵션을 행사할 의도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함.

- (보고자) 이것은 기간귀속의 문제는 아님. 이 평가손실의 본질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자 간에 판매불능 재고와 판매가능 재고를 교환한 것이고 이렇게 오래된 재고를 테스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 팔리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정보이용자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임.

- (보고자) Waiver Letter 관련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음. 회사가 계약서상에 2016년말까지 상장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2016년말에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Waiver Letter를 2017년까지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임.

○ (위원) 지적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상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세부쟁점사안에 대해 하나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음. 허위 기재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임. 허위 기재로 판명이 되어 실제로 상폐가 된 사례가 있는지?

- (보고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음.

○ (위원) “상장할 수 있었다.”에 대한 질적요건 관련해서 회사 쪽에서는 대형법인이어서 손실이 나도 상장이 가능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시고 금감원에서는 2017년 이전 당기순손실을 발생시킨 대형법인이 상장된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사례가 없는지?

- (보고자) 기술특례상장을 제외하고 2016년까지 적자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한 사례가 없음.

▶ (진술인) 코스피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음. 만약에 코스닥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됐다면 자연스럽게 코스피를 선택하면 다 해소되는 문제였음.

- (위원) 그다음에 질적요건 관련해서 만약 손실이 났는데 그 손실의 원인이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판단의 잣대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 (진술인) 특수관계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평가손실이 일시적인 사유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한국거래소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이유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함.

- (보고자) 교환의무가 없음에도 교환해 준 행위 자체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이 되고 성장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상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함.

- (위원) 공모가 산정과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PER이 아닌 다른 평가방법으로도 충분히 공모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제시는데, 상장예비심사청구할 때는 PER로 했다가 다시 바꿀 수가 있는지?

▶ (진술인) 예비심사청구서에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공모가 산정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진행됨.

- (보고자) 회사가 얘기하는 부분은 증권신고서에 이미 PER이 가장 회사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기재를 하고 있고, PBR이나 PSR 기타 방식은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증

권신고서에 이미 기재를 했음. 그래서 PER이 적합한 방식이었고 회사는 다른 방식으로 산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진술인) 당연히 회사가 이익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PER을 썼던 것이고, 만약에 손실이었다면 PER이 아닌 다른 방법을 처음부터 고민했을 것임.

○ (위원) 특수관계자 거래는 회사 쪽에서는 상업적 실질 유·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금감원 쪽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우에는 상업적 실질 유·무는 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함. 이에 대한 회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 (진술인) 미래의 현금흐름에 변동이 전혀 없는 거래임. 회계처리 자체도 수행하지 않았는데 회계적 사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은 오히려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보고자) 저희가 판단한 것들은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이러한 교환거래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라면 당연히 공시해야 된다고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회신이 왔었음. 시장에 충분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래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임.

○ (위원) 질적요소 측면에서 정보이용자 관점으로 봤을 때

특수관계자 간의 반품도 정보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 (진술인)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동등한 재고가 교환이 됐고, 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판매가능한 재고가 판매가능한 재고로 변경됐을 뿐임. 비록 유효기간이 조금 더 긴 것이 됐지만 유효기간 이내에만 있다면 하루가 차이 나든 1년이 차이 나든 동등한 가치로 외부에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조차 질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함.

○ (위원) 회사 쪽에서는 허쥬마는 신규 교환으로 보고 트룩시마는 반품교환으로 보는 것인지?

▶ (진술인) 교환이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교환이든 반품교환이든 사실 큰 차이가 없지만 반품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셀트리온에서 자발적으로 반품을 해서 교환해 주겠다고 요청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구분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교환처리라고 생각하고 있음.

- (보고자) 이것은 계약상 조항에 근거하지 않은 교환이기 때문에 반품이 될 수 없고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교환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음.

▶ (진술인) 계약상 초기안전재고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

드는 것이 (주)셀트리온의 의무였음. 계약상 220C로 허가를 진행해서 허가에 실패할 경우에는 반품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220C로 결국 허가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판매가능하도록 만들도록 요구할 수 있었음. 그러면 (주)셀트리온에서는 220C에 대한 허가 노력을 기울여야 됨. (주)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보다 경제적인 판단을 해서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220C의 허가를 진행하는 것보다 230C로 반품을 해서 교환해 주는 경우가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해서 진행했던 것임. 그리고 계약상 모호하다는 표현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초기안전재고에 대해서 계약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셀트리온은 그 초기안전재고가 판매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음. 다만, 여하한 경우에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반품이 아니라 미리 지급한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것이지, 그 재고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계속적인 허가 노력을 기울여서 허가를 받게 만들거나 허가된 제품으로 반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다만, 대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호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사가 협의를 통해서 (주)셀트리온의 경제적인 목적의 의사결정이었음.

- (보고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기준서상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고 특수관계자 간에는 거래금액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문단6에서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한국회계기준원 회신에서도 실질 여부보다는 정보이용자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음. 저희는 독립

적인 제3자 간의 거래였다면 이것은 매출을 일으키고 그 매출채권을 재고자산으로 회수하는 거래로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함. 하지만 (주)셀트리온과 (주)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에서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고, 재고자산을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진술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 재무제표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래임. 그리고 미래에도 어떠한 차이도 일으키지 않는 거래임. 동일한 재고가 다시 동등한 판매가능한 재고로 바뀌었을 뿐인데 이것이 특수관계자든 제3자든 회계처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동일함.

○ (위원) 사후정산부채에 대해서 ○○○님은 분기NSR(Net Sales Report) 존재를 알고 계셨는지?

▶ (진술인) ○○○社の 경우에는 Net Sales Report는 연간으로만 있음. 분기에 있는 것은 분기 평균가격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있고 목적자체가 정산이 목적이 아니었음.

- (보고자) 분기별로 받는 자료나 연간으로 받는 자료의 형태나 작성방식이 동일함.

▶ (진술인) 그렇지 않음.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되어 있음. ○○○社は 연간단위로만 정산한다고 되어 있음.

○ (위원) 그러면 감사인한테 제출할 자료가 분기평균가격보고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Net Sales Report는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 (진술인)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했던 회계정책은 Net Sales Report를 받으면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Net Sales Report상의 금액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고 확정된 시점에 재무제표에 꼭 반영해 왔음. 그래서 감사인이 항상 요구했던 부분은 재무제표에 반영된 정산금액에 대한 증빙이었음. 금감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리포트(report)의 내용이 같다는 부분이지만 명백하게 계약서상으로 목적을 달리하고 있음. 분기별로 받는 리포트(report)에 대해서 ○○○社가 정산을 요구할 권리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기 중에 받았던 리포트(report)의 내용이 같다고 하더라도 정산 목적이 아닌 것은 분명함.

- (보고자) 감사인이 요구했던 것은 매출로 회계처리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다 달라고 요청을 했음. 저희가 봤을 때는 분기마다 받는, 회사가 주장하는 평균가격보고서 이 자료는 매출조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는 감사인에게 ○○○社의 보고서는 연간으로만 받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음. 회사가 계속적으로 ○○○社는 분기를 안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인이 분기 NSR을 요구할 수 없었음.

- (위원) 이제 제일 중요한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고 해서 그것을 소급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음. 회사 쪽에서는 EMA쪽 자료를 제출하셨고 금감원 쪽에서는 식약처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식약처는 2022년 1월5일에 소급적용 안 된다, EMA는 사후적인 것이지만 된다고 이야기를 함.

▶ (진술인) (주)셀트리온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던 재고 대부분이 해외 판매이기 때문에 EMA를 참고하는 것이 맞음.

- (보고자) EMA와 FDA는 당시 2016년말 상황에서 회사가 100A를 판매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 그래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100A의 판매계획이 있었던 보건당국에 물어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 (위원) DS에서 DP로 전환을 했는데 변경기간 이전에 생산한 건에 대해서만 소급적용이 되는지?

▶ (진술인) 회사는 출하 당시에 유효기간이 허가된 유효기간과 맞느냐의 한 가지 기준에만 적합하다면 어떤 것도 출하가 가능함.

- (보고자) 제조시점에 유효기간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식약처의 답변에 따르면 EMA나 FDA의 기본적인 입장도 동일할 것이라고 들었음.

- ▶ (진술인) 식약처에서 2018년에 받은 공문이나 이번에 받은 공문에도 출하하는 당시에 변경허가 전에 제조한 것이 유효기간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공문 저희도 받았음. 이번에 식약처에서 공문 오기 전까지 소급적용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도 동의를 했었음. 그리고 이번에 EMA에서 얘기한 것에도 저희가 무려 84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87개월에 생산을 하고 90개월에 변경허가 받은 다음에 출하(release)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 하느냐고 물어봤고 EMA에서 그 부분도 90개월 변경허가 받은 다음에 출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받았음.
- (위원) 한국에서는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DS에서 DP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유효기간 변경 이전에 DP로 생산한 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냐, EMA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는지?
- ▶ (진술인)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가능하다고 했음. 회사는 한국에서도 유효기간 지난 상황에서 변경한 후에는 출하 가능하다는 것을 2018년과 2020년에 공문을 받았음.
- (위원) 100A에서 200A로 넘어갔는데 100A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 ▶ (진술인) 정리해서 제출하겠음.
- (보고자) 유통기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음. 회사

에서는 발생한 당시의 상황, 당시 회사의 의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경우가 2016년말에 100A를 팔 수 있는지, 유효기간 적용이 소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는 EMA나 FDA나 어느 보건당국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음.

(15시12분 정회)

(15시27분 속개)

- (위원) FDA, EMA에 대한 입장이 한국식약처의 공문과 상호 충돌되고 있는 것 같음. 혹시 생산시점에는 DS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나중에 DP 출하시점으로 해서 유효기간이 소급적용되어 실제로 판매한 사례는 없었는지?

▶ (진술인) 자료 제출하겠음.

- (위원)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과 관련해서 금감원은 트룩시마 교환이 계약서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독립된 경제실체 입장에서 (주)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16년말에 재고자산 4,000억원에 대해서 평가손실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회계감사를 하는 감사인이 100A, 200A, 220C, 230C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 (진술인) 감사인은 220C나 230C에 대한 특별한 구분은 없었음.

- (위원) 금감원은 2016년말에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 유효기간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평가손실을 계상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면 (주)셀트리온헬스케어는 독립된 실체로서 계상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것임. 그러니까 운송밸리데이션이 내부에서 얘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것을 판매 안 해도 운송밸리데이션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주)셀트리온에 넘기고 New version을 받게 되니까 이것은 평가손실 당연히 계상할 필요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쥬마의 교환이 2017년에 1,600억 원, 그리고 2018년에 1,400억 원 이렇게 나누어서 됨. 맞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주)셀트리온에서 2017년에는 1,600억 원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언제 가지고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또 달라지는 것임. 그러니까 운송밸리데이션 2017년 3월에 결정(decision) 될 때 얼마만큼 물량을 가지고 갈 것인지, 전체를 다 가지고 가는데, 2017년에 얼마 가지고 가고 2018년에 얼마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 의사결정이 된 것인지, 운송밸리데이션을 한다고만 의사결정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만한 이슈(issue)가 있음.

- ▶ (진술인) 물량에 대해서는 공문상 2017년 3월에 다 확정되어 있었음.
- (위원) 금감원은 계속적으로 반품은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 제재대상이라는 것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회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 ▶ (진술인) 계약서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가 사업 초기할 때 향후에 일어날 일들의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음. Master 성격의 계약이었고 공동협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양사가 합의해서 하자고 했던 것 자체가 그 모든 세부(detail)적인 것들을 계약서에 담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음. 그래서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을 계약상 협의체인 공동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계약에 근거한 교환이나 반품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어떠한 계약서도 세부(detail)적인 것을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음. 공동협력위원회 자체가 계약상 근거한 합의 조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에 준하는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음.
- (위원) 그렇다면 공동협력위원회의 결정이 계약서적 효력이 있다면 그 자료가 감사인한테 제공이 되었는지?
- ▶ (진술인) 공동협력위원회 자료는 전부 감사인에게 제공이 되었음.

○ (위원) NRV자료를 외부감사인한테 제공을 하였는지?

▶ (진술인)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는 다 제출했음.

- (보고자) 외부감사인은 명확하게 제공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음.

▶ (진술인) 정확히 감사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저희는 사실 모르겠음.

- (보고자) 2016년말에도 NSR(Net Sales Report) 자료 등 매출에 참고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회사는 분명히 2016년에 그런 분기별로 만든 자료가 없다는 mail을 보낸 내역이 있고, 최초로 2017년에 회사가 제1115호기준서를 조기 도입함. 그때 처음으로 분기별 보고서를 받았다는 식으로 ○○회계법인에 언급을 해서 2017년 10월 즈음에 처음으로 분기별보고서의 존재를 알았다고 기재한 mail내역이 있음.

▶ (진술인) 지금 금감원과 (주)셀트리온헬스케어 입장이 너무 다르고 이것이 사실관계 확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음. 그래서 ○○회계법인 출석하는 증선위에 저희의 출석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

○ (위원장)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들리니까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 (위원장) 추가적으로 진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슈(issue)와 쟁점을 가리지 말고 보완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 앞서 사후정산과 관련해서 매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산시기와 무관하게 매출을 최선의 추정치를 이용해서 추정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음. 다만, 당시에 저희가 감사인과 가졌던 생각은 가장 최근의 추정치를 PO가격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음. 왜냐하면 계약서상 모든 유통사가 동일함. 유통사가 저희에게 주는 구매주문서의 가격은 가장 최근의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그들의 마진을 뺀 가격으로 주문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 얘기는 구매주문서의 가격이 최근의 시장가격으로 업데이트되어 온다는 이야기임. 그런 부분 때문에 감사인은 구매주문서상의 단가를 신뢰했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계속 매출을 인식해 왔음. 그리고 그 가격의 변동도 구매단가를 보면 추세를 알 수 있던 상황이었음. 그런데 ○○○社의 경우에는 2016년 시점에 구매주문서의 단가와 Net Sales Report의 단가가 다르게 오기 시작했음.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도 여러 차례 확인요청을 했지만 ○○○社에서 적절한 답을 받지 못한 상태였음. 구매주문서는 유통사가 저희에게 주문을 내고 먼저 저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금액임. 그렇다면 대금을 먼저 주면서까지 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음. 그렇기 때문에 구매주문서상의 단가가 시장의 가격을 반영한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나 감사인은 그것을 신뢰하고 계속 매출추정을 해 왔음.

그리고 회계정책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 회계 정책에 대해서 감사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음. 확정된 시점에 정산금액을 반영한다는 회계정책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맞춰서 회계처리 해 오는 회사의 정책을 한 번도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었음.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주세요.”의 얘기는 없었음. 사후정산과 관련해서 재무제표에 반영된 회계처리에 대한 증빙을 달라고 했을 뿐이지, 포괄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생각함. 설사 금감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포괄적인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에 대한 근거로서 구매주문서라든가 이런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회계정책에 대해서도 다 인지하고 이견 없이 진행해왔던 과정에서 갑자기 2016년에 분기매출보고서를 감사인이 요청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 ▶ (진술인) 재고자산평가와 관련해서 회사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2016년 10월경에 이 재고자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issue)를 인식하고 있었음. 그렇기 때문에 당시 담당임원이 (주)셀트리온한테 이 재고자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장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한 기술적 자료를 요청했었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음. 만약에 회사가 판단할 때 3,000억 원이라는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은 완제로 전환하는 것임.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보는 사업계획과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 제품

을 판매할 수 있냐 하는 것인데 당시에 사업계획은 충분히 팔 수 있었다는 것이었음.

- (보고자)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반적인 바이오업계, 제약업계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사실은 감독당국이나 한국거래소나 외부감사인은 많지 않음. 이 상황에서 지금 회사의 자료를 제출한 것들을 보거나 회사에서 진술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이것이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저희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 두 번째로 재고자산평가손실 관련임. 당시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2016년말의 상황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함. 그 당시에 명시적인 판매계획이 없었다면 인정할 수가 없음. 만약 100A에 정말 판매계획이 있었다면 100A와 200A는 마케팅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름. 각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전략들이 다름 텐데 그렇다고 하면 2016년말 당시에 그런 100A만은 판매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됨. 회사는 2016년말에 사업계획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계획은 100A의 사업계획이 아님. 100A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ROW시장과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ROW시장의 판매배치를 보면 가지고 있었던 실제 그 물량의 대부분은 브라질과 일본에서 나옴. 일본은 기본적으로 200A로 허가를 추진하지, 100A로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 그리고 브라질도 2016년 10월에 200A로 전환을 했음. 그래서 2016년말 시점에서 보면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200A에 대해서 판매계획이 있었던 것임. 그다음에 유효기간 적용과 관

련해서 회사의 경우, 프로토콜(protocol)이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00A의 생산이 2013년 이후에 중단됐음. 생산이 중단된 100A의 로직(logic)을 지금 와서 다 구현이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했다고 고려할 요소인지는 저희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그리고 회사에서 2016년말에 우리는 독립회사로서 고민을 했을 테고 만약 유효기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DP로 전환하면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씀하셨음. 단적으로 DP를 전환해서 가지고 있었던 uDP를 어디에 썼는지를 보면 명확함. 그리고 만약에 2017년 1월 이전에 DS가 48~60개월 사이에 전환이 됐었다면 이 부분은 국내 기준에 의하면 제조시점 기준으로 유효기간 48개월을 경과한 재고를 썼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팔수가 없음.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48개월로 최초 허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같은 식약처의 개념을 적용하면 판매할 수가 없음. 마지막으로 '고의'인가와 관련해서는 운송밸리데이션부터 보시면 됨. 운송밸리데이션을 해서 실제 허가목적으로 쓴 것이 하나도 없음. 재고 자체를 소진하기 위해서 썼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임. 그리고 그당시에 (주)셀트리온은 (주)셀트리온헬스케어를 부당지원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은 그룹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감리의 한계 때문에 얻지 못한 부분들은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의'로 판단을 했음.

▷ 진술인(제14호 관련)이 퇴장함.

○ 각각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 49분 폐회)